

평화·번영·통일시대의 등장과 노동자 자주통일운동의 과제

- 4.27 판문점선언 “봄이 온다” ,
- 9월 평양공동선언 “가을이 왔다”
- 불가역성, 파격, 빠른 속도로 전진하는

평화 · 번영 · 통일시대

- 미 제국에 대한 인식의 통일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략을 짜야

2018. 10. 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 작성자 : 김장호 객원 정책연구위원 (02-844-0615)
 - 민주노총 이슈페이퍼는 민주노총 홈페이지(<http://www.nodong.org>)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객원연구위원의 이슈페이퍼는 연구자 개인 견해이며, 민주노총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 차>

<요약>	1
1. 평화번영·통일시대의 등장 : 그 배경과 동력	2
1) 북의 핵무력 완성과 전략의 전환	2
2) 미국의 쇠퇴와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4
3) 남의 촛불혁명과 문재인 정부의 등장	6
2.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의 내용과 의미	8
1) 4.27 판문점 선언의 내용과 이행과정	8
2) 9월 평양공동선언의 내용과 의미	13
3) 평화번영·통일의 새 시대 특징	18
3.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노동운동의 노력	19
1) 민주노총 통일위원회 2018년 사업계획	19
2) 노동자 통일촉구대회	20
3) 통일선봉대	22
4) 2018년 상반기 민주노총 통일위원회 사업 총평	23
4. 노동자 자주통일운동의 과제	24
1) 노동자 자주통일역량 강화	24
2) 간부양성, 대중운동의 영역에서의 새로운 시도	25
3) 촛불혁명 완성과 평화번영통일을 위한 노동계급의 역할	26

〈요 약〉

- 4.27 판문점선언에서 “봄이 온다”로 시작하여, 9.19 남북공동선언에서 “가을이 왔다”로 정점을 찍으며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4.27판문점 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은 “평화번영·통일의 한반도 시대”가 출현했음을 알리는 역사적 선언이다.
- 평화번영·통일의 한반도 시대는 북의 핵무력완성과 전략의 전환, 미국의 쇠퇴와 미국우선주의의 등장, 남쪽 민중의 촛불혁명과 문재인정부의 등장이라는 조건들이 맞물리면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 4.27 판문점 선언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계승본이자 종합판이며, 선언보다는 실천적 이행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9월평양공동선언은 4.27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제반영역에서의 실천적 선언이다. 구체적으로 사실상 남북간 종전선언을 실행하는 내용이며, 남북간 교류와 경제협력을 진전시키고, 미국이 참가하는 종전선언을 위한 남북공동의 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 평화번영·통일의 한반도 시대는 불가역성, 과격과 대담, 빠른 속도를 특징으로 하며, 반대세력의 저항을 무력화하며 전진하고 있다.
- 민주노총, 노동운동만이 대중적 민간교류를 돌파할 힘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 남북노동자 통일촉구대회는 4.27판문점선언 발표 이후 최초의 대규모 민간교류사업을 성사시키면서, 각계 전반에 평화통일 여론을 크게 조성하였고, 공동합의문 발표로 판문점 선언 이행에 대한 남북 노동자들의 조직적, 실천적 과제와 향후 사업방향 제시했다.
- 노동운동이 평화번영·통일의 한반도 시대를 주도하려면, 노동자 자주통일 역량강화에 최우선적인 비중을 두어야 한다. 교육사업, 간부양성, 가맹산하 통일위 정비가 중요하다. 착취와 억압의 근원이 미 제국에 대한 인식의 일치성을 바탕으로 평화번영·통일 시대의 노동운동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1. 평화번영·통일시대의 등장 : 그 배경과 동력

4.27판문점선언에서 “봄이 온다”로 시작하여, 9.19남북공동선언에서 “가을이 왔다”로 정점을 찍으며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불과 1년 만에 남북 양정상은 3차례의 정상회담을 진행했고, 연말까지 북미간에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고,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방문이 성사된다면, 그야말로 2018년은 세기의 기적을 창조한 한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4.27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은 “평화번영·통일의 한반도 시대¹⁾”가 출현했음을 알리는 역사적 선언이다.

이러한 역사적 급변사태²⁾가 가능했던 요인은 크게 3가지이다.

1) 북의 핵무력 완성과 전략의 전환

북은 지난 2017년 11월 29일 장거리탄도미사일 ‘화성-15’를 시험발사한 직후 정부성명을 통해,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켓 강국 위업이 실현됐다³⁾”고 선포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신년사에서 “지난해 우리 당과 국가와 인민이 쟁취한 특출한 성과는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성취한 것”이라고 밝히고, “우리 공화국은 마침내 그 어떤 힘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강력하고 믿음직한 전쟁 억제력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선언한 다음, “미국은 결코 나와 우리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걸어보지 못합니다.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 핵 타격 사정권안에 있으며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 이는 결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⁴⁾라고 언명했다.

2018년 1월 22일(현지시간) 당시 마이크 폼페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북한이 미사일로 미 본토를 타격할 능력을 갖추는 데까지는 앞으로 몇 개월여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국은 북의 핵무력 완성선언이 일정하게 포장되었다 하더라도 북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능력을 조만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공식 시인한 것이다.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전 나토(NATO)군 총사령관 겸 미 해군 연구소 이사회 의장은 블룸버그

1) ‘평화번영·통일의 한반도 시대’라는 용어는 필자의 자의적인 용어이다. 특히 9월평양공동선언 이후 4.27시대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한 지도 논의거리가 되고 있다. 그래서 논의 전개를 위해 4.27판문점 선언에 나오는 ‘평화번영·통일’의 내용을 인용하여 ‘평화번영·통일의 한반도 시대’라고 편의상 붙인 규정임을 미리 알린다.

2) 미국과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염두에 두었던 모종의 북의 급변사태와는 정반대의 방향에서 진행되는 급변사태이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성명, 2017년 11월 29일

4) 김정은 국무위원장 2018년 신년사, 2018년 1월 1일

칼럼을 통해 “북한의 비밀 병기는 EMP”라며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진다고 해도 북한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⁵⁾

북이 어느 정도의 핵무력을 가지고 있고, 여타 비밀병기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는 베일에 싸여 있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미 제국이 등장한 이래 미국 본토를 타격할 의지와 능력을 가진 국가가 등장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미국은 심각한 안보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북의 대미전략은 독특하다. 한편으로는 매우 투명하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핵무력을 과시한다. “지난해 우리는 각종 핵운반 수단과 함께 초강력 열핵무기 시험도 단행함으로써 우리 총적 지향과 전략적 목표를 성과적 성공적으로 달성하였으며, 우리 공화국은 마침내 그 어떤 힘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강력하고 믿음직한 전쟁 억제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⁶⁾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북의 핵무장력을 포함한 군사력은 비밀에 감추어져 있다. 사실 이 문제는 미국과 한국의 군사정보전문가들이 북의 핵무장력에 대해 다양한 의도를 깔고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함으로써 발생한 문제이다.

어찌되었든 미국은 미국 본토타격이라는 안보위협을 완화시키기 위해 북에 협상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것은 공화당 정부이든, 민주당 정부이든 마찬가지이다. 이미 북이 핵강국으로 등장한 조건에서 미국이 북과의 관계를 재조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여기에 북이 정의용 특사단 방북 당시 “비핵화 협상의지”⁷⁾를 표명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북과 전쟁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북미간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정상적 외교관계로 전환하는 협상에 임하는 길로 들어섰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2018년 신년사에서 남북관계의 대전환을 예고했다.

“지금이야말로 북과 남이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북남관계를 개선하며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워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⁸⁾면서 “남조선에서 머지않아 열리는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로 될 것”이며, “대표단 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 자신의 사회주의강국건설 전략의 변화이다.

5) “北 비밀병기는 전자기파 공격...정상회담서 EMP 무기 다뤄야”, 배정원 기자, 조선일보, 2018년 4월 26일

6) 김정은 신년사, 중앙일보, 2018년 1월 1일

7) 정의용 수석특사 방북 결과 언론발표, 청와대 홈페이지, 2018년 4월 20일

8) 김정은 신년사, 중앙일보, 2018년 1월 1일

2018년 4월 20일 진행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전략적 노선이 밝힌 역사적 과업들이 빛나게 관철되었다는 것을 긍지높이 선언"하고, "우리 공화국이 세계적인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라선 현 단계에서 전당, 전국이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 당의 전략적노선"⁹⁾이라고 천명하였다.

이 점을 두고 많은 국내외전문가들이 북이 핵을 버리고 경제를 선택했다거나, 중국이나 베트남식 개혁개방을 선택했다거나 하는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누가 뭐라하든 북은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올라선 조건에서 경제강국의 고지를 점령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것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몇 년 지나봐야 알게 될 것이다.

요약하자면 세기의 기적이라고 할 만한 남북, 북미간 급변하는 정세는 핵강국의 지위에 올라선 북의 전략적 선택에 따른 것이다.

2) 미국의 쇠퇴와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2016년 11월 9일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운 트럼프가 힐러리를 꺾고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트럼프의 당선은 미제국의 쇠퇴와 몰락의 위기를 감지한 미국국민이 우익과 폴리즘 정치를 선택한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러한 미국정치의 균열 이전에 보다 근본적인 미 제국의 위기는 2008년 금융공황 당시 폭발했다.

거품경제를 조장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앨런 그린스펀도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2008년의 금융공황도 시장자유원칙 운운하며 탐욕과 무지로 일관해온 미 제국의 오만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시인했다. 이런 사태의 심각성은 2009년 1월 말에 열린 다보스포럼에서도 여과 없이 표출되었다. “지금의 문제는 1930년대의 경제공황보다 더 심각하다”고 한 조지 소로스와 “약 50조 달러의 자산이 증발했다”고 한 미국의 언론 재벌 머독의 탄식이 바로 그것이다.¹⁰⁾

전 미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는 “국민을 지배하는 수단은 식량이고, 대륙을 지배하는 수단은 에

9) 북, 당 중앙위 7기 3차전원회의의 결정..., 플러스 코리아 타임즈, 2018년 4월 21일

10) 아메리카 제국의 몰락(하), 359쪽, 황성환, 민플러스

너지이며, 세계를 지배하는 수단은 화폐”라고 설파한 바 있다. 세계 방방곡곡을 피로 물들이며 미 제국의 이데올로기를 강제로 이식해온 키신저의 지적대로, 세계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온 달러 시대도 이제 막을 내리고 있다.¹¹⁾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략, 팽창주의적 군사전략을 지향하는 미국 주류 지배엘리트들의 전략에서 이탈한 것이다. 그럼에도 트럼프가 민주, 공화 양당 지배엘리트의 공동지원을 받은 힐러리를 꺾고 당선된 것은 그만큼 미국의 위기가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미국우선주의란 미 제국이 “양복입은 조폭”에서 “웃통 벗은 조폭”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뜻한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선언,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 이주자난민 문제에 대한 인종차별주의적 정책, 보호무역주의에 기반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압박, 미·중간 무역전쟁, 이란 핵협상 파기, 대북 국제제재 강화 등 제반 정책의 기준은 미국에 이익이 되는가 아닌가이다. 이러한 철저한 자국이기주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밀어붙인 미국 대통령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견고한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다. 그만큼 미국의 위기는 뿌리가 깊다고 할 수 있다.

2017년까지만 해도 북 역시 미국우선주의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화염과 분노”, “최고의 제재와 관여정책”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트럼프식 미국우선주의는 양면적 특징과 특수한 지형위에 서 있다. 미국우선주의 양면적 특징은 한편으로는 마구잡이식 침략과 약탈행위로 나타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의외의 고립주의적 행태로도 나타난다. 이란과의 핵협정을 파기하고, 시리아를 폭격하고, 각종FTA협상 재협상을 강행하며 미중무역전쟁을 유발하는 것은 여전히 침략적이고 약탈적이며 난폭하다. 그러나 경찰국가 포기, 주한미군 철수 운운 등의 정책에서는 고립주의적 양태를 보인다. 바로 이런 특징 때문에 미국의 지배와 통제 하에 있던 국가들에서 기회를 엿볼 수 있는 공간이 발생하게 된다.

트럼프가 특수한 지형위에 있다는 것은 군산복합체에서 군산-금융-정보 복합체로 진화한 미국 주류 엘리트그룹의 반격이 만만치 않다는 것, 일부 진보층에서도 인권과 미국식 가치를 무시하고, 국제적 갈등과 고립을 심화시키는 트럼프식 미국우선주의에 대한 혐오감이 팽배하다는 것, 때문에 다양한 층의 반트럼프 전선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게다가 트럼프 자신이 러시아 스캔들, 성스캔들로 인한 탄핵의 불씨가 여전하고 백악관내 갈등이 심화되면서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11) 아메리카 제국의 몰락(하), 357쪽, 황성환, 민플러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 처한 위기 중에서 최대의 위기가 바로 북핵위기라는 점이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까지 “전략적 인내” 전략이 통했던 것은 아직 북의 장거리탄도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로켓엔진, 장거리 미사일, 잠수한탄도미사일, 유도제어기술, 핵소형화, 경량화, 다중화 등의 기술을 확보하고 미국본토에 실질적인 위협으로 북의 핵무장력이 가시화되자 북핵문제가 미국에게 최우선 현안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미국은 이제 전쟁이든, 협상이든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미국이 북과 전쟁을 선택하는 고려는 언제나 해 왔다. ‘워터게이트’ 사건 취재로 명성을 얻은 <워싱턴포스트> 부편집인 밥 우드워드도 최근에 펴낸 <공포:백악관의 트럼프> 책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초 많은 재원을 투입해 미군을 한반도에 주둔시키는 데 대한 회의론을 제기했고, 지난해에는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에게 선제적 군사공격 방안을 만들 것을 요청했다”고 폭로했다.¹²⁾ 트럼프 행정부는 수차례의 해명 성명을 내야 했다.

오바마 행정부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우드워드도 같은 책에서, 북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한 2016년 9월9일, “전쟁을 피하고자 하는 강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북핵 위협이 정확한(외과수술 방식의) 군사 공격으로 제거될 수 있을지 검토해야 할 시간이 됐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는 표면적으로 전략적 인내정책을 취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의외로 구체적인 대북공격정책을 다양하게 검토한 정황이 책에 그대로 나왔다고 언론들은 전한다. 그러나 결국 백지화되었다. 이후 전 오바마 대통령은 후임자인 트럼프 대통령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북한 문제’가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말했다.

이런 조건에서 다행히도 북이 “비핵화 의지”를 밝히며 미국과 협상을 하자고 제안해 왔다. 미국이 시간을 끌고 술수를 부릴 수는 있겠지만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명백해졌다.

3) 남의 촛불혁명과 문재인 정부의 등장

2017년 3월 10일 11시,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탄핵을 선고했다. 2016년 10월 29일부터 2017년 4월 29일 23차에 걸쳐 연인원 1천6백80만 명에 이르는 촛불혁명의 결과였다.

촛불혁명은 박근혜 정권 등장 이후 이에 저항하는 국정원 시국회의에서부터 진보당강제해산반대 국민운동본부, 교과서국정화저지 네트워크, 세월호 희생자연대모임 416연대, 민주주의국민행동, 민중총궐기운동본부의 험난한 저항과 투쟁의 결과이다. 이 저항의 줄기에 시민사회단체연대가 가세하면서 ‘박근혜정권퇴진비상행동(퇴진행동)’으로 결집하는 과정이 촛불혁명의 폭발과정이

12) 미 행정부, ‘대북 선제공격 논의’ 등 내용 담긴 우드워드 책 반박, 팸(미국의 소리), 2018년 9월 5일

었다. 또한 ‘안녕하십니까? 대자보’, 역사전쟁, 세월호 투쟁, 민중총궐기, JTBC 데블릿 보도, 백남기 농민 투쟁 등 주요 변곡점들이 촛불혁명 진화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¹³⁾

촛불혁명은 2015년 민중총궐기로 문정저항이 본궤도에 오르고, 2016년 5월 30일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패배하자 지배층 내부에서 균열이 발생했다. 여기에 JTBC의 최순실 국정농단 폭로 보도로 뇌관이 터지면서 폭발한 위대한 민중항쟁이었다.

그리고 2017년 5월 9일 대선에서 문재인후보가 촛불민중의 염원을 담아 19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국정과제를 제출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서는 ‘전략 1 :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전략 2 :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전략 3 :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를 내세웠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운전자론”으로 대변된다. 한편으로는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북미간의 중재역할을 잘 해 나간다는 정책이다.

2017년 취임 1년간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강화, 트럼프 행정부와 신뢰관계 구축에 공을 들였다. 이 시기 문재인 정부는 사드를 배치하고, 미국의 대북제재에 동참하면서 ‘과연 촛불로 탄생한 정권이 맞나?’하는 의구심과 비판을 자아냈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간 신뢰를 강화하면서 평창올림픽을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개선하는 중대한 전환점으로 설정해 왔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북과 미국이 호응하지 않는 조건에서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2018년 북 신년사에서 전향적인 대남대미정책이 나오면서 반전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운전자론을 실현하는 공간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2018년 4.27판문점 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으로 문재인 정부가 움직인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촛불혁명의 힘이다. 촛불혁명은 분단적폐세력의 핵심인 친미수구세력의 힘을 결정적으로 약화시켰다. 촛불민중은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키고,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에 승리를 몰아주었다.

이러한 촛불의 힘과 문재인 대통령의 도덕적 자질이 결합되면서 공미의식(미국에 대한 공포)의 통제하에 있고, 정세순응적이었던 운전자론이 보다 주동적인 운전자론으로 진화하는 양상이다.

13) <촛불민중혁명사>, 원희복, 도서출판 말 참조

이렇게 4.27판문점선언, 9월평양공동선언으로 이어지는 평화번영·통일로 가는 새시대의 등장은 북의 핵무력완성과 전략의 전환, 미국의 쇠퇴와 미국우선주의의 등장, 남쪽 민중의 촛불혁명과 문재인정부의 등장이라는 조건들이 맞물리면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2. 4.27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내용과 의미

1) 4.27판문점 선언의 내용과 이행과정

(1) 4.27판문점 선언의 내용

판문점선언의 정확한 명칭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명확하다. ‘6.15남북공동선언’은 표현 그대로이고, 10.4선언은 “10.4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다. 판문점 선언은 정확히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계승본이자 종합판이라는 점이 선언 제목에도 잘 나타나 있다.

판문점 선언은 모두 3조 13개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총 5조로 구성된 6.15공동선언보다 많이 길고, 총 8조로 구성된 10.4선언에 비해 구성이 조와 항으로 나뉘어져 있고 전체 2,757자인데, 2,618자인 10.4선언보다 약간 길다.

판문점선언은 서문에서 평화번영·통일문제에 대하여,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4.27판문점 선언을 두고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었고, “통일의 이정표”를 세웠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이다.

판문점선언은 6.15공동선언 1항의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나간다는 표현을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한다는 표현으로 대체했는데, 상대적으로 선명하고 개념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6.15공동선언 2항에 있는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한다는 대목은 반영하지 않았다. 먼저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며, 문재인정부의 현재 처지와 입장을 고려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조 ①항에서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함으로써 말로 하는 “선언”보다 실천적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명박, 박근혜정부를 거치며 6.15, 10.4선언이 휴지조각이 되고 “잃어버린 10년”을 보낸 것에 대한 경계가 깔려있음을 알 수 있다.

4.27판문점 선언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

- ① 민족자주의 원칙 확인, 기존 남북 간 선언·합의 철저히 이행으로 관계 개선과 발전
- ② 고위급회담 등 분야별 대화를 빠른 시일 안에 개최, 실천대책 수립
- ③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지역 설치
- ④ 각계각층의 다방면적 교류·협력 및 왕래·접촉 활성화.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 추진,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 공동 출전
- ⑤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진행,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 ⑥ 10.4선언 합의사업 적극 추진,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2.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위험 해소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

- ① 상대방에 대한 모든 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 ② 서해 평화수역 조성으로 우발적 충돌 방지 대책 마련, 안전한 어로 활동 보장
- ③ 국방부장관회담 등 군사당국자회담 수시 개최, 5월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

- ① 무력 불사용과 불가침 합의 재확인 및 엄격 준수
 - ② 상호 군사적 신뢰의 실질적 구축에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 실현
 - ③ 올해 종전선언,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자 또는 4자 회담 개최
 - ④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의 목표 확인
- 정상회담 정례화 및 직통전화 실시, 올해 가을 평양에서 정상회담 개최

선언의 구성을 보면, 남과 북이 손을 잡고 해야 할 “교류와 협력”, “공동번영”을 위한 중대한 조치들이 1조에 우선적으로 들어가 있으며, ③항에 각각의 대표부가 아니라 “남북공동연락사무

소 개성지역 설치”가 들어가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2조에 특별하게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위험 해소”를 위한 공동노력사항이 별도의 조항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그만큼 남북사이의 평화를 선행하는 것이 절실하고 반드시 실천해야 하며, 또 가능한 과제임을 천명한 것이다.

3조에서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는 점은 세 가지 점에서 중요하다.

첫째는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남북의 확고한 과제로 내세웠다는 점이다. 남북정상이 이 점과 관련해서는 완강하고 비타협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둘째로 “중전 선언,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자 또는 4자회담”을 연내에 달성해야할 공동의 목표로 내세웠다는 점이다. 9.19 평양 남북정상회담은 바로 이 점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한 만남이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공동목표로 제기하였다. 한반도 비핵화가 남이 북을 상대로 한 과제이거나 북이 홀로 미와 상대하는 과제가 아니라 남북공동의 과제라는 점을 천명한 것이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운전자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들어가 있다.

(2) 4.27판문점 선언의 이행과정

4.27판문점 선언부터 9.19평양공동선언까지 정확히 141일 경과했다.¹⁴⁾ 4.27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많은 일들이 진행되었다.

빠르게 움직인 것은 역시 북이었다. 이미 3월 25일부터 28일 동안 1차 북중정상회담을 통해 북 중관계를 근본적으로 복원한 바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5월 7일 다롄에서 2차 북중 정상회담을 열었다. 5월 9일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2차 방북을 통해 미국인 억류자 3인을 데리고 귀환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공항까지 마중 나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최대의 감사인사를 전했다. 5월 22일에는 워싱턴에서 4.27판문점 선언의 내용을 공유하고,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그러나 한미정상회담이 있는 지 이틀 만에 그리고 5월 24일 북이 풍계리 핵실험 강도 폭파한 직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예정돼 있던 6·12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취소한다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5월 26일 깜짝 실무형 정상회담(4차 정상회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2차정상

14) 이하 세부 내용은 통일부 월별 남북교류일지를 주로 참고했다.

회담)이 북측 통일각에서 열렸다.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긴급히 복구시킨 후 공동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4.27판문점선언의 3조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5월 30일~6월 2일까지 북 김영철 특사가 방미하여 트럼프에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는 사이, 6월 1일에는 2차 남북 고위급회담 회담이 열리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와 분야별 회담 일정에 합의했다.

6월 14일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에서는 서해 해상 충돌 방지 이행과 군통신선 완전 복구를 위한 6.4 합의를 만들어 냈다. 6.15 남북공동행사 '현실적인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무산되었다. 6.12북미정상회담이 있는 지 6일이 되는 6월 18일에는 남북체육회담이 열리고 남북통일농구경기, 2018 아시안게임 단일팀 구성 등 합의했다. 6월 22일에는 남북적십자회담이 열리고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8.20~26사이에 금강산에서 열리고 합의했다.

6월 26일, 28일에는 철도·도로협력 분과회담에서 공동연구조사단 구성과 현지 공동조사 등을 합의하였다.

7월 2일부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공사가 시작되었다. 7월 4일 평양에서 남북통일 농구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남북 산림협력 분과회담에서는 병해충 공동방제 및 현장방문, 산림과 학기술협력 등 합의가 이루어졌다.

7월 16~23일 동안 대전에서 코리아오픈 국제탁구 대회가 개최되고, 남북 탁구 단일팀 출전하여, 혼합복식에서 우승한 우진-차효심 남북 단일팀조가 중국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7월 16~19일 동안 김홍걸 남측 민화협 의장이 방북하여 일본강제징용자 유해봉환사업 진행에 합의하고 돌아왔다.

8월 8일에는 남측 12명이 금강산을 찾아 북측 10여명과 함께 병해충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8월 10일에는 남측 국제유소년축구대회 참석자들이 19일까지 방북 길에 올랐다.

8월 11~12일 동안 서울에서 남북 노동자 통일축구대회 상암경기장에서 북측 대표단 65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8월 13일에는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이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조명균 통일부장관과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8월 15일에는 남북, 동해 군통신선 연결 및 시험통화 성공했다.

8월 18일부터 9월 2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팔렘방에서 아시안게임에서는 남북이 개,폐회식에서 공동입장을 하고, 3개 종목에서 남북 단일팀 구성하여 카누 용선 여자 200미터 동메달, 500미터 금메달, 남자 용선 천 미터 동메달, 여자농구 단일팀 은메달을 수상했다. 자카르타 아

시안 게임에서 남북단일팀은 코리아 (Korea)라는 이름을 달고 출전하였고, 남과 북은 현지에서 공동응원활동을 펼쳤다.

8월 20~26일에는 금강산면회소에서 각 100명씩의 가족이 이산가족상봉 행사를 가졌다.

8월 31일~9월 15일 기간에는 2018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에 북 선수 22명이 참가했다.

불과 4개월 만에 많은 일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4.27판문점선언 이행과정이 순탄치 만은 않았다.

5월 16일 예정되었던 1차 남북고위급 회담이 불과 10시간을 앞두고 전격 취소되었다.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엄중한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조선의 현 정권과 다시 마주 앉는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맥스 썬더' 훈련과 당시 국회에서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가 대북강경 발언한 것을 두고 북에서 심각한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¹⁵⁾ 5월 26일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6월 1일 남북고위급회담을 열고 합의함으로써 재개될 수 있었다.

3차 남북고위급 회담은 8월 13일 5차 남북정상회담을 실무협의를 위해서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렸다.

6·12 북미정상회담이 만들어낸 센토사 합의 이후 핵리스트 제출과 종전선언의 선후관계를 놓고 북미간 난항을 거듭하며 북미 고위급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미국은 제재의 고삐를 더욱 옥죄어야 한다면서 남북간 4.27판문점 선언 이행사항에 대해 걸음마다 난관을 조성했다.

4.27판문점 선언 이행을 미국이 제재위반이라는 이유로 제동을 건 것은 이미 6월부터 시작되었다.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6월18일과 6월28일 연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전화를 걸어 강력한 대북제재를 압박했다.¹⁶⁾ 6월 25일엔 이례적으로 조명균 통일부장관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대북제재 유지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통화는 폼페오 국무장관이 7월25일(현지시각)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대북제재를 이어가기로 한 입장을 밝히기 직전에 이뤄졌다.

7월 26일에는 방한 중인 마크 램버트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이 코레일을 비롯한 대북경협기업 관계자들과 비공개 만남에서 "대북 경협에 너무 앞서 나가지 말라"는 미국 정부의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¹⁷⁾ 심지어 그는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민간 기업들이 북한(조선)과 교류사업을 추진할 때 반드시 정부와 사전 협의를 하고, 필요하면 미국측에도 직접 문의하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 참석한 남북경협 기업인은 "비핵화 협

15) 북한, 남북 고위급회담 당일 취소 "무기한 연기", 신은별 기자, 한국일보, 2018년 5월 16일

16) 폼페오, 한-중 외교장관과 통화... "비핵화까지 대북압박 지속", 김영남 기자, VOA(미국의 소리), 2018년 6월 30일

17) '남북 경협 예외 요구'에 美 우려... "대북 제재 따라야", 최형문 기자, MBC, 2018년 7월 26일

상이 완전히 마무리돼 모든 제재가 해제되기 전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겠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북제재에 대한 전방위적인 단속과 압박은 한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개성공단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공사를 위한 물자 반입에 대한 포괄적 대북제재 유예 조치를 신청한 시점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북이 2020년 도쿄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스포츠용품 관련 제재 대상에서 제외를 요청했지만 미국의 반대로 각하됐다.¹⁸⁾ 4.27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다양한 남북의 노력이 미국의 대북제재 앞에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결국 미국의 반대로 8월말에 예정된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개소는 9월로 연기되었다. 유엔사는 남북이 경의선 철도 북측 구간을 공동으로 조사하려던 계획 역시 8월 30일 '48시간 이전 사전 통보 시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핑계로 불허했다.¹⁹⁾

미국은 남북관계 발전이 북미관계 발전보다 절대 앞서나가는는 안된다고 반복해서 경고했다.²⁰⁾

2) 9월평양공동선언의 내용과 의의

이런 조건에서 5차 평양남북정상회담이 잡혔다.

5차 평양남북정상회담은 무수한 명장면과 명언들을 남기며 또 하나의 세기의 기적으로 기록되었다.

9월평양공동선언의 목표와 의미는 4개 문단으로 되어 있는 서문에 잘 나와 있다. 일부만 발췌하면, 양 정상은 우선 “대화와 소통”, “교류와 협력”, “군사적 긴장완화”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남북관계 발전을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여망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현재의 남북관계를 통일로 이어나가기 위해 정책적으로 실현해가자는 문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반 문제들과 실천적 대책들을 허심탄회하고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 이번 평양정상회담이 중요한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는 점도 중요하다. 5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18) "IOC 대북 수출 품목서 스포츠 장비 제외 요청 美가 거부", 뉴시스, 2018년 7월 26일

19) 남북 철도 공동점검, 유엔사가 불허...‘주권 침해’ 논란, 이재훈 선임기자, 한겨레, 2018년 8월 30일

20) 국무부 “남북관계 개선, 핵문제와 별개로 진전 안돼...비핵화 실패하면 제재 유지”, 백성원 기자, VOA, 2018년 8월 14일

이유를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천적 대책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 위한 장으로 설정한 것이다.

9월평양공동선언은 사실 4.27판문점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제반 영역에서의 실천선언의 성격이 강하다. 구체적으로 사실상 남북간 종전선언을 실행하는 내용이며, 남북간 교류와 경제협력을 진전시키고, 미국이 참가하는 종전선언을 위한 남북공동의 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1) 9월평양공동선언은 남북간 종전선언

선언은 총 6조 14항으로 되어있다. 그 중 첫 번째 조항이 바로 사실상 “남북종전선언”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평양공동선언 1조는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하였고, ①항에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였다. ②항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기로 하였다.

(2) 9월평양공동선언은 교류협력과 민족경제발전을 위한 실천적 이행선언

9월평양공동선언은 사회경제분야에서 4.27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실천선언이다. 2, 3, 4조가 다 이러한 실천대책에 관한 내용이다.

2조에서는 “남과 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합의하고, ① 금년내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 ②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문제 협의, ③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 적극 추진, 우선적 산림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 ④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 긴급조치,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 협력 강화를 명시했다. 남북정상은 이제 남북경협을 가시권 안에 넣기 시작했다.

3조에서는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① 금강산 지역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개소, ② 이산가족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 우선 해결 등에 합의했다.

4조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을 위해, ① 문화 및 예술분야의 교류 증진, 10월 중 평양예술단 서울공연 진행, ② 2020년 하계올림픽경기대회 등 국제경기 공동 진출,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공동개최 유치 협력, ③ 10·4 선언 11주년 기념행사 개최, 3·1운동 100주년 공동기념 등에 합의했다.

(3)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 대한 공동의 목소리

9월평양공동선언 5조는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고 함으로써 종전선언에 대한 공동입장을 확인했다.

4.27판문점 선언 3조 ③항은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문구는 유엔에 공식문서 제출과 정에서 한 차례 번역논란을 거쳤다.²¹⁾

남북 정상은 이미 4.27판문점 선언에서 연내 종전선언을 명확한 공동목표로 했던 것이다. 실제로 6.12 싱가포르 회담에서도 미국이 초안을 준비할 정도로 종전선언문제는 임박한 문제였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에 2,3차례 약속하고 공언했던 사항이었다.

3차 평양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중대한 합의들이 이루어진 동기에는 남북정상회담이 아니고서는 북미간 교착을 타개할 수 없고, 연내 종전선언도 쉽지 않으며, 판문점 선언 이행에도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양 정상의 절박한 정세인식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21) 4.27 판문점 선언 직후 외신에 배포한 청와대 비공식 영문번역본 : “During this year that marks the 65th anniversary of the Armistice, South and North Korea agreed to actively pursue trilateral meetings involving the two Koreas and the United States, or quadrilateral meetings involving the two Koreas,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ith a view to declaring an end to the War, turning the armistice into a peace treaty, and establishing a permanent and solid peace regime.”(3자, 4자 회담 개최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 - 종전선언 하기 위해, -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해, -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 체제 구축하기 위해로 해석될 수 있다.)

9월 6일 남북공동이 제출한 [유엔 제출 공식 번역본] “The two sides agreed to declare the end of war this year that marks the 65th anniversary of the Armistice Agreement and actively promote the holding of trilateral meetings involving the two sides and the United States, or quadrilateral meetings involving the two sides,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ith a view to replacing the Armistice Agreement with a peace agreement and establishing a permanent and solid peace regime.”(1. 연내 종전선언 하기로 합의, 2.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3자, 4자회담 개최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로 의미가 명확히 정리되어 있다)

4.27판문점선언은 3조 ④항에서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고,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로 한 수준이었다.

여기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는 9.19평양공동성명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①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 ②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는 내용이 결국 북의 책임과 역할의 내용이고, “③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남이 해야 할 책임과 역할이다.

남의 역할만 중심으로 보자면 한미동맹 아래 대북압박을 기본으로 하던 것에서 4.27판문점 선언 이후에는 북미간 가교역할을 강화하고 9월평양공동선언에서는 북의 선제적 신뢰조치를 기반으로 남북이 공동안을 마련하며, 대미관계에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방향으로 진화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남측 정부도 대미관계에서 단순한 북측 메시지 전달자에서 공동안을 만들고 미국을 설득하는 입장으로 전환해 가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제 미국이 종전선언을 회피할 명분은 거의 없다. 이것이 9월평양공동선언의 최대의 성과이다.

(4)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에 대한 기대감

9월평양공동선언 6조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9월평양공동선언의 이행의 확신을 심어주고, 더 큰 미래가 눈앞에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조항이다. 사상 최초의 북 지도자의 서울방문이 실현된다면 남과 북은 이제 더 큰 평화번영의 고속도로로, 자주통일의 대로로 질주하게 될 것이다.

3) 6.12북미공동성명 이행과정과 2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열린 북미간 정상회담은 북미관계가 새로운 관계로 진입했다는 것을 알리는 역사의 전환점이었다.

6.12북미공동성명은 2000년 10월 12일 조미공동코뮤니케나 2005년 9.19공동성명과 유사한 점도 있으나 결정적 차이가 있다. 우선 2005년 9.19공동성명은 중국이 주도하는 6자회담의 산물이었으나, 이번 6.12북미회담은 북미간 직접 정상회담의 산물이다. 2000년 조미공동코뮤니케는 북미간 직접합의의 산물인 것은 맞지만 어디까지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대리해서 조명록 차수가 미국 워싱턴을 찾아 클린턴 대통령과 합의한 것으로 양정상의 직접 협상의 산물은 아니었다.

내용에서도 차이가 있다.

2005년 9.19공동성명은 북의 비핵화를 먼저 앞세우고, 양국 간 평화구축회담은 별도의 포럼에서 진행하기로 되어 있었다. 북이 9.19공동성명의 진행경과를 놓고 “선의를 가지고 비핵화에 먼저 합의했으나 언제가도 평화구축에 관한 북미간의 협의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비판한 것은 이런 맥락을 놓고 한 말이었다.

때문에 6.12북미공동성명이 서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새로운 북미 관계를 형성하고 한반도에 지속적이고 견실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지속적이고 포괄적이며 깊이 있으며 진실된 의견 교환을 진행”했다고 밝히고 있다. 총 4개조로 되어 있는 6.12북미공동성명은 1조에서 “미국과 북한은 평화와 번영을 향한 양국 국민의 열망에 따라 새로운 미국-북한 관계를 수립할 것을 약속한다.”고 되어있다.

북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뼈에 사무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6.12북미공동성명은 4개 조항 밖에 없는 추상적인 공동성명이지만 문구가 선명하고 사상최초의 양정상의 직접협상의 산물이기에 실현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공동성명이다. 또한 양정상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타당한 방식으로 양국 간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기조를 반영하고 있어 동시조치, 단계적 이행도 실무적 압초에 걸려 좌초되기보다는 정치적으로 극복해가는 양상을 띠 것으로 보인다.

6.12북미공동성명의 이행은 첫 단계부터 압초를 만나 교착상태에 빠졌다.

6.12북미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1차 북미고위급회담차 7월 5~6일 평양을 방문했던 폼페오 국무장관은 빈손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고,²²⁾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도 못했다. 8월말 2차 북미고위급 회담은 출발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시켰다.²³⁾

쟁점은 하나였다. 북은 미국에 종전선언을 하자는 것이고, 미국은 북에게 종전선언 이전에 핵리스트를 내놓으라는 것이다.

22) 비핵화 시간표는 미국에게 달렸다, 김장호, 민플러스, 2018년 7월 9일

23) 트럼프가 폼페오 장관의 방북을 취소했다, BBC코리아, 2018년 8월 25일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선언이나 주한미군 철수 등의 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쉽게 생각하는 편이나 미국내 군산복합체 세력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종전선언 자체가 주한미군철수로, 한미동맹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북미간 관계개선에 걸음마다 발목을 잡았다. 미국내 정치지형은 트럼프가 이러한 반대를 쉽게 넘어서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

이런 조건에서 5차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진행되고 북은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라, 즉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면 영변핵시설 영구 폐기하겠다는 카드를 꺼냈다. 그리고 2차 북미정상회담을 제안하고 여기서 더 높은 단계의 관계발전에 대한 제안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조야에서는 북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되고 종전선언을 절대 해주지 말라는 경고로 가득 차 있지만, 미국의 종전선언에 합류하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종전선언을 거부할 경우 반대급부는 미국이 생각하는 것보다 클 것이다. 미국은 전면적인 국제적 고립에 빠지는 국제지형이 조성될 것이 분명하다.

종전선언 약속을 지키지 못한 미국에 대한 남북 민심과 여론도 급격히 악화될 것이다. 미국은 시간을 끌 수는 있지만 정치적 외통수에 벗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4) 평화변영·통일의 새시대 특징

(1) 불가역성 : 4.27판문점 선언, 6.12북미공동성명의 이행은 불가역적이다. 즉 반드시 이행된다. 불가역성,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 이것이 평화변영·통일의 새시대의 제일의 특징이다.

그 근거는 우선 북의 핵무력의 성격에서 나온다. 북의 핵무력완성은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의 지원과 협조 속에서 평화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다. 몇 차례의 전쟁위기를 넘기고, 심지어 인근의 중국마저도 미국의 외교수술적 대북 타격을 용인할 정도로 반대해왔다. 이러한 군사적, 외교적 압박을 물리치고 완성해 낸 핵무력이다. 때문에 이 핵에 대한 처분권은 여전히 확고하게 북의 손에 달려있다.

다음으로 북이 경제면에서 달라지고 있다. 이 역시 평화롭고 협조적인 조건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다. 방북했던 인사들이 평양이 상전벽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바뀐 것은 중국처럼 개혁개방의 산물이 아니다. 오히려 자강력 제일주의와 과학기술의 결과이다. 때문에 북이 북미간 새로운 관계개선과 한반도 비핵화를 외교적, 평화적 해결하는 기본 추진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미국은 이것을 뒤돌릴만한 힘이 없다. 그것이 있었다면 북의 핵무장과 경제성장도 막았어야 한다.

3차 평양정상회담에서 보여주듯이 남북관계의 발전 역시 불가역적인 길로 전진하고 있다. 촛불혁명 이후 남쪽 친미수구세력은 상당기간 이걸 거꾸로 돌리지 못한다. 남북관계가 발전하면 발

전할수록 이를 거꾸로 돌리려는 세력들의 힘은 더욱 약화될 것이다.

어떤 면에서 모든 평화번영·통일로 가는 새 시대의 흐름은 불가역적인 힘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2) 명장면이 가득한 파격의 연속 : 평화번영·통일의 새시대는 파격, 결단, 예측할 수 없는 선제 조치 등으로 세인의 경탄과 감동을 주는 방식으로 전진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국면을 이끌어 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리더십이 그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품성, 트럼프 대통령의 기질 등이 맞물리면서 더욱 극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는 사실에 대한 세인의 경탄은 시작에 불과했다. 남북 양 정상에 판문점 경계선을 올라갔다 내려오는 장면, 도보다리 장면, 싱가포르 회담의 각 장면, 평양 5.1경기장 연설, 백두산에 선 두 정상의 모습 등 명장면의 연속이었다.

이러한 리더십의 표현은 기존사고방식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대담성, 의외성과 파격을 낚음으로써 호감과 감동을 주고, 여론을 장악하는 힘을 발휘하며, 저항세력들을 무력화시키는데 있어서도 극적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3) 빠른 속도 : 평화번영·통일의 새시대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다.

2000년 남북정상이 만난 이래 18년 동안 5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 중 3차례가 2018년 7개월 동안 진행되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방문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새벽에 백두산에 오르고 저녁에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을 보고 있다. 남북 정상은 이러한 속도조차도 시대의 요구에 비하면 결코 빠른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평화번영·통일의 새시대는 그 추진동력, 공간의 확장력, 속도 모든 면에서 새로운 시대임이 틀림없다. 민족과 민중의 운명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낼 새로운 시대로 한반도는 태풍처럼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

3. 4.27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노동운동의 노력

1) 민주노총 통일위원회 2018년 사업계획

민주노총 통일위원회는 2018년 크게 ‘6가지 사업기조 및 방향’을 잡았다.²⁴⁾

-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폐기, 평화협정 체결, 한반도 비핵화와 전 세계의 핵무기 철폐(2013년 중집 결의안) 등의 정신에 의거 반전평화 투쟁 전개
- 사드배치 철회, 한미합동군사훈련 저지, 한미일 군사동맹 폐기, 한반도 평화실현 투쟁.
- ‘남북정상회담, 남북자주교류, 전민족대회 성사’로 제2의 6.15 10.4 시대 투쟁 강화.
- 반전평화, 자주통일의 역량 확대 강화! (현장 실천단, 지역별 지통대, 중통대 등), 8.15전국노동자대회 및 자주통일 민중총궐기 성사!
- 반전평화, 자주통일 교육의 혁신과 강화! (강사단 육성, 교육체계 마련, 의무교육 강화)
- 국가보안법 철폐, 공안탄압 분쇄, 제2의 북한알기의 대중운동 전개

원안에서 앞의 두 기조는 ○ ‘반미자주화’의 기치로 사드배치 철회, 한미합동군사훈련 저지, 한미일 군사동맹 폐기, 한반도 평화실현 투쟁을 강화하자!, ○ ‘우리민족끼리’ 정신으로 남북자주교류 성사, 남북관계 대전환, 제2의 6.15 10.4 투쟁 강화하자! 였는데, 평창올림픽, 판문점정상회담이 예고되는 정세를 반영하여 한미관계영역과 전민족적인 반전평화영역을 구별하여 기조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앞의 세 가지는 투쟁영역으로 전민족적인 평화협정체결과 관련된 투쟁, 이남에서의 한미동맹해체투쟁과 사드반대투쟁, 남북이 하나되는 자주교류와 민족대단결 투쟁 영역을 적절히 배치했다. 뒤의 세 가지는 주체역량강화를 위한 계획으로 현장실천단, 지통대, 중통대사업을 핵심으로 8.15전국노동자대회와 자주통일 민중총궐기를 성사시키자는 것이고, 통일간부양성을 위한 교육강화, 대중적인 북바로알기 등을 제출하고 있다.

민주노총 통일위원회가 2018년 제시한 사업구호는 “남북관계 및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전환적 국면을 열어내자!”, “반전평화, 자주통일 투쟁역량 확대 강화!”이다.

중요사업으로는 군사훈련 저지 투쟁, 연중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응 투쟁, 4.3항쟁 70주년 정신 계승 투쟁, 강제징용노동자상 세우기 투쟁, 남북정상회담 성사 촉구와 남북노동자 자주교류 성사투쟁, 각계각층 전민족대회 추진 사업, 현장별 실천단, 지통대, 중통대 사업, 강사단 육성, 교육체계 마련, 의무교육 강화 등이 주요사업으로 설정되었다.

이중 중요한 몇 가지만 살펴보기로 하자.

24) 중앙위제출 통일위원회 사업계획, 3차 민주노총 통일위원회 회의자료(2018.3.14.) 36쪽부터 참조

2) 노동자 통일축구대회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는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 조직위원회 주최로,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주관하여, 2018년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서울 남북노동자 축구대회는 매우 급박한 일정 속에서 조직되었다. 원래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북측 직총에 보낸 7월 3일자 팩스에서 8월 13일~16일 기간 동안 노동자 축구대회를 하자고 제안했고, 7월 11일~14일間に 실무회담을 요청하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이틀째 되는 날인 7월 5일 직총은 8월 3일~5일 2박3일간 일정으로 남북노동자 축구대회를 하자고 역제안이 온 것이다. 양노총은 난리가 났다. 8월 3일~5일은 여름휴가기간인데다가 통선대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직전이고, 전체 조합원의 동원도 장담할 수 없는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남북간 급하게 팩스가 오고간 끝에 2018년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는 8월 10일~12일간 열리게 되었다.²⁵⁾

8월 10일 서울을 방문한 65명의 북측 대표단은 양대노총을 방문하고 저녁에 환영만찬을 가졌다. 여기에는 북측 64명 양노총 200명의 인사가 참여했다.

8월 11일에는 직총, 민주노총, 한국노총 3단체 대표자회의가 진행되고, 곧이어 산별지역별 상봉모임이 이어졌다. 이후 북측 대표단은 중앙통일선봉대와 함께 용산 노동자상 참관하고, 오후 4시부터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노동자 통일축구대회가 진행되었다.

8월 12일 마석모란공원 참배를 마친 북측 대표단은 3단체 대표자, 실무자 사업협의회를 끝으로 도라산 CIQ를 통해 육로로 돌아갔다.

상암경기장에 참가한 민주노총 조합원은 9,355명으로 집계되었고, 한국노총은 6,500명으로 보고했다. 노동자 통일축구대회 직전에 광화문에서 개최된 자주통일대행진 행사에는 2,875명이 참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6.15 노동본부차원에서 진행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에 대한 총평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²⁶⁾

(1) 우선 4.27판문점선언 발표 이후 **최초의 대규모 민간교류사업을 성사**시키면서, 각계 전반에 평화통일 여론을 크게 조성한 의의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지속적으로 제안되고 있는 조건에서 노동부문이 그 첫 단추를 꿴 것은 남

25) 남북 노동자 통일축구 개최 경과보고, 긴급임시 통일위원회 회의(2018.7.11.), 3쪽~12쪽

26) 8/10~12일,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 평가 건, 9차 민주노총 통일위원회 회의 및 수련회 자료(2018.9.12.) 38쪽~43쪽

북연대교류사업 전반에서 노동의 선도성을 유지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의 성과이고, 이번 대회를 계기로 전반적 민간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민간연대교류 전반에서 노동계의 위상과 역할을 더욱 높이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2) 공동합의문 발표로 판문점 선언 이행에 대한 남북 노동자들의 조직적, 실천적 과제와 향후 사업 방향 제시했다는 점을 밝혔다.

남북노동자3단체는 공동합의문은 ▲ 10.4선언 발표일을 맞으며 각계각층이 함께하는 거족적인 민족공동행사를 성사시키기 위해 앞장에서 노력 ▲ 오는 8월 15일부터 10월 4일까지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노동자 통일실천기간>으로 선포하고 다양한 실천 활동 ▲ 10.4선언 발표 11돌을 계기로 <제2차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회>를 개최하고 판문점선언을 강령화하기로 하였으며, 해마다 대표자회의를 정례화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3항에서 ‘남과 북의 노동자들은 6.15시대의 정신을 이어 새로운 판문점선언 시대를 앞장에서 열어나가기 위해 노동자 통일운동의 정치적, 대중적, 조직적 발전을 이루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대노총은 남북노동자 합의문에 기초하여 10.4민족공동행사를 성사시키기 위해 앞장에서 노력할 것이며 아울러 ‘제2차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회’ 성사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고, 판문점 선언 이후 첫 민간자주교류를 실현한 노동자답게 향후 판문점 선언 시대의 남북노동자 통일운동 강화와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들을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3) 몇 가지 개선과제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6.15남측위원회와 소통을 통해 <남북노동자통일촉구대회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각계의 참여를 보장하고자 노력했으나, 6.15남측위와 6.15노동부문 간의 적절한 역할 분공을 구체적으로 추진하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집행과정과 관련해서는 공동사무국 운영문제, 재정문제, 조직화 목표달성 문제, 촉구대회가 전 노대의 의의를 얼마나 살렸는지에 대한 문제, 사전교육의 필요성, 행사팀에 대한 개입력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4) 촉구대회 직전 광화문에서 개최된 <판문점선언 실천, 8.15 자주통일 범국민대행진>과 연동해서 바라보아야 할 평가지점들도 있다.

이날 행사는 ‘판문점선언 실천, 8.15자주통일대행진 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이 주관한 행사로서 8월 11일(토) 13시부터 14시30분까지 시청 앞에서 집회후 광화문 미 대사관앞까지 행진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6.15남측위는 노동자통일축구대회를 부문행사 수준으로 인식하지 않고 판문점 선언 이후 최초로 남측지역에 열리는 거족적인 민간공동행사의 높이에서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나, 실무적으로는 자주통일 대행진을 안정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보장되지 않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하고, 통선대, 평화통일박람회, 천북대행진, 4.27대합창 등 각 사업의 목표에 따라 실속있게 진행된 것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또한 통일축구대회에서 통일선봉대, 서울시민서포터즈, 4.27대합창 등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3) 통일선봉대

노동자 통선대는 역대 최대참가를 기록했다. 전일정 8.5일~12일, 전반기 8.5일~8일, 후반기 8.9일~12일이었는데, 연인원 325명을 기록했다. 한국노총은 8월 9일부터 12일까지 50명이 참가했고, 민대협 8월 4일부터 11일까지 33명, 진보대학생넷 6월 6일부터 11일까지 30명, 대진연 8월 3일부터 12일까지 107명, 국민주권연대 아라리 5월 5일부터 12일까지 30명이 참가하는 등 총 575명의 통선대가 참가했다.²⁷⁾

통선대는 8월 6일 부산 8부두에서 기지투쟁과 공동발대식을 시작하여,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서 “부산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 축구 통선대 결의대회”로 본격 일정을 시작했다. 8월 8일 통선대는 왜관을 거쳐 성주 사드기지로 총집결했다. 마을회관에서 ‘소성리수요집회 및 명예통선대 발대식’을 가졌고, 사드기지정문으로 달려가 학생통선대를 중심으로 기지 행동전에 돌입했다. 밤에 김천역에서는 김천촛불, 그리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명예통선대 발대식을 이어갔다. 8월 10일에는 평택에 집결했다. 앞서 기무사 해체투쟁에 다녀온 통선대원들은 평택에서 기지투어, 군기지 폐쇄 축구 결의대회 및 명예통선대 발대식을 진행했다. 8월 11일 서울에 입성한 통선대는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규탄집회를 하고, 미대사관 앞으로 이동하여 815자주통일대행진에 합류했다.

통선대 활동에 대한 내부 평가는 아직 진행 중이다. 우선 몇 가지 초별적으로 나온 이야기만 간단히 요약해서 옮겨본다.

2017년과 마찬가지로 통선대 ‘노학연대’ 활동이 가장 좋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동 선곡에 맞추어 공동율동도 만들고, 공동의 일정과 공동의 투쟁들을 함께 기하고 잦은 일정변경에도 불구

27) 8.15 부대사업 및 부문 사업 현황 및 평가, 9차 민주노총 통일위원회 회의 및 수련회 자료(2018.9.12.) 10쪽

하고 노동과 대학생은 함께 한다는 기조에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다.

통선대 발언에서도 노동대원은 ‘대학생들과 함께 하니 좋다’ 는 내용의 발언이 많았고, 대학생 대원은 ‘이후에도 계속 노학연대를 통해 세상을 바꿔나갔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발언이 많이 나왔다.

지역과 함께하는 미군기지 투쟁의 상을 세운 것, ‘명예통선대 발대식’ 등도 좋았다는 평이다. 통선대는 미군기지 투쟁을 이후 전면화한다는 결의와 지역에서 투쟁하는 분들과 함께하는 통선대를 기조를 세우고, 부산, 왜관, 소성리(성주, 김천), 평택 미군기지 등에서 해당 지역과 사전 소통하며 집회를 만들고, 발언도 배치하는 등 지역과 함께 하는 통선대 투쟁을 만들어 내었다. 또한 소성리(성주, 김천), 평택에서는 지역에서 투쟁하는 13명의 대표들에게 명예통선대원 수여했다. 수여식을 진행하며 ‘일상이 투쟁이 되어버린 분들에게 우리 통선대가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의미를 담아 통선대의 마음을 드린다’ 고 할 때 많은 분들이 박수치며 감동했으며, 명예통선대원들은 ‘우리의 부대가 왔다’, ‘정말 고맙다’ 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감동적 풍경이 이어졌다.

4) 2018년 상반기 민주노총 통일위원회 사업 총평

민주노총 통일위 사업에 대한 평가는 이룬 감이 있지만, 내부의 간단한 총평은 있었다.²⁸⁾

급박한 정세에 따라 통일위가 집행해야 할 사업이 급격하게 늘어났고, 이에 따른 인력과 재정 투입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컸다.

통일위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숙제로 떠올랐다. 통일위가 건설되어 있지 않은 가맹, 산하 지역본부에 통일위를 세우는 것이 우선적 과제로 제기되었다.

통일위는 연대사업이 많은 반면, 민주노총은 공문으로 집행이 처리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통일관련 연대단체에서 좀 더 빠른 집행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한편 4.27 판문점 선언이후 정세에 대한 교육 요구는 많았으나 정세 교육자료들이 시의성이 떨어져 활용하기 힘든 상황이 많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의 시의성, 도달성 등을 고려하여 일상적 교육활동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제기이다.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대중적 행동전이 결합되는 사업기획에 대한 요구도 높았다.

판문점 선언에 군축에 대한 약속이 있으나 이를 위반하고 있는 사드에 대한 투쟁을 잘 하지 못

28) 2018년 상반기 민주노총 통일위원회 평가(초안), 9차 민주노총 통일위원회 회의 및 수련회 자료(2018.9.12.) 47쪽

한 점에 대한 반성도 있었다.

미국전쟁반대노조협의회와 두 차례 교류를 통해 ‘남북 인민이 한반도 평화의 조건을 결정할 권리를 미국 노동자들이 지지한다’는 메시지가 부각되었던 점은 연대사업의 좋은 사례로 평가되었다.

4. 노동자 자주통일운동의 과제

1) 노동자 자주통일역량 강화

민주노총은 모든 사업에서 역량강화에 더욱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과거 6.15시대에도 엄청난 남북노동자 교류 사업이 있었고, 통일위원회는 그 어느 위원회보다도 활성화되어 있었다. 통일선봉대 운동도 흥미했다. 2000년대에는 민주노총 조합원만으로도 1만여 명이 넘는 8.15노동자 대회 행사를 치르곤 했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그 이후 노동자 자주통일역량이 얼마나 축적되고 강화되고 이어지고 있는지 평가해야할 대목이 많다. 수많은 사업들이 이벤트적으로 진행되었지만 정작 노동자 자주통일역량은 얼마나 강화된 것인지 평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살펴보아야 한다.

이제 막 열리고 있는 “평화변영·통일의 새시대”에 노동자가 주역으로 나서려면 단순히 행사와 이벤트를 치러내는 역량만으로는 부족하다.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고 시대를 선도하는 노동자 자주통일운동의 부대를 만들 필요가 있어 보인다.

민주노총이 2015년 민중총궐기로 박근혜 정권의 몰락의 단초를 열었지만 정작 촛불혁명의 시기에는 큰 힘을 쓰지 못하고 주도권을 상실하고 말았다.

앞으로 진행될 평화변영·통일의 새시대에도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려면 민주노총과 노동운동은 노동자 자주통일역량강화를 모든 사업의 최우선의 목표로 삼을 필요가 있다.

2) 간부양성, 대중운동의 영역에서의 새로운 시도

자주통일정세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할수록 일은 많고 일손은 부족하다는 호소가 늘어나는 것 같다. 그런데 “천일양병 일일용병”이라는 말이 있듯이 평소에 노동자 자주통일 간부를 키워놓지 못했으니, 평화변영·통일의 새시대라는 엄청난 정세변화 앞에서 간부와 일손이 부족한 것은 당

연해 보인다.

그런데 앞서 분석했듯이 평화번영·통일의 새시대는 이제 시작이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앞으로 무조건 노동자 자주통일간부를 키우는 사업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주도권을 쥐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가맹산하조직, 큰 규모의 단위노동조합에서 통일위원회체계가 안 서 있는 문제부터 풀어야 할 것 같다. 노동자 자주통일사업에 대한 지도집행력, 전국적 네트워크가 완성되어야 한다.

자주통일 교육사업, 강사진 구성, 양성사업에서 미진했다는 평가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보인다. 결국 간부양성은 교육을 통해서 진행되는데, 사업을 많이 벌이는 것 보다 간부양성교육이 내실있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대중운동 영역에서 2017년에 진행한 강제징용노동자상 같은 사업이 모범적이라고 평가 받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중앙에서 큰 판을 짜고 구체적인 집행은 각 가맹산하 조직이 자신의 능력과 조건에 맞게 자발적으로 진행했다. 이런 유형의 사업들이 더욱 많이 펼쳐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4.3 노동자 대회도 몇 년간의 경험을 축적하여 2018년부터 가맹산하 조직에서 책임지고 진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도 중요한 성과이다. 이런 발전속에서 가맹산하 단위에서 4.3강사단, 안 내원 요구가 높아지는 것을 수요에 맞게 예측력 있게 보장하는 역할이 중앙의 역할이라고 판단된다.

평화번영·통일의 새시대에 걸맞은 대중운동을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올해는 때를 놓쳤지만 하반기에 잘 준비해서 2019년 단체협약에 4.27판문점 선언 이행조항을 새로 체결하는 운동을 전개하는 것도 방법이다. 사회공헌기금에 4.27판문점 선언 이행항목을 포함시킬 수도 있다. 이런 큰 틀을 제시하면, 가맹산하 각 노동조합에서 매우 창발적이고 역동적인 임단협 체결운동, 4.27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현장운동의 모델이 창조될 것으로 믿는다.

3) 촛불혁명 완성과 평화번영통일을 위한 노동계급의 역할

앞으로 노동운동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정치적 판단을 수반하는 상황들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의 대상으로서의 자본자계급과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은 평화번영, 통일의 길에서 손을 잡아야 하는 복잡한 형국이 도래하고 있다.

노동존중, 노동기본권 보장에서 우유부단한 문제인 정권에 한편으로 저항하고 비판하면서도 평화번영, 통일의 길에서는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정황들이 많이 발생한다.

함께 손잡고 나가야 할 통일의 길에 정작 정권차원의 자주통일진영에 대한 배제가 진행되기도 한다.

앞으로 경제, 사회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고 전면화될 경우 여기에서 노동의 입지가 과연 더 보장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도 예견된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민주노총과 노동운동은 전략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

단순히 계급적, 계층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자주와 통일의 길에서 각계민중이 하나로 뭉치는 길, 진보와 보수가 하나로 뭉치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민주노총은 확고한 전략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민주노총이 이 땅 노동계급의 가장 주되는 착취자가 미 제국에 있다는 점을 확고하게 인식하고 내부적으로 인식상의 통일을 이루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과거와 달리 이 점에 대한 통일성은 높다. 97년 IMF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공황, 신자유주의 폐해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중동침략전쟁을 함께 목격하고 함께 저항했으며, 한반도 전쟁위험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노동기본권도, 경제주권과 경제민주화도, 항구적 평화체제와 자주통일도 결국 이 땅에서는 ‘미 제국의 문제’에 달려있다는 점만 분명하게 하면 나머지 문제에서 차이란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 인식상의 통일에 기반해서 이 땅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을 크게 단결시키고 더 큰 세상의 주역으로 나서야 한다.